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 발전*

류석춘·왕혜숙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사회자본의 '일반화된 호혜성' 개념을 통해 재구성한 글이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공동체로 하여금 강한 내부적 통합성을 유지하여 공공재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제공하며, 외부 집단과의 경쟁 국면에서 공동체를 강한 유대로 결속시킨다. 한국 사회의 미시적 수준에 존재하는 개별 집단(마을, 기업)은 물론이고, 거시적 수준의 국가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재분배 과정에서 일반화된 호혜성을 내부의 규범으로 삼아 조직적 통합성 및 완전성을 이룩할 수 있었다. 흔히 '발전국가'로 개념화되는 한국의 국가는 특히 미시적 단위인 마을이나 기업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를 동원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미시적 단위의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거시적 단위인 국가 사이에 일반화

* 이 논문은 2003년부터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 “한국의 사회자본: 전통 사회와 현대사회의 비교”(과제번호 KRF-2003-074-BS0033)의 일환이다. 이 논문에 등장하는 면접 사례들은 이 과제의 2차년도 작업 “현대 한국의 인간관계에 관한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 8개 집단(어촌계, 향우회, 동창회,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종친회, 각각 100명 목표) 가운데 전통적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향우회, 종친회, 어촌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이 자료를 기초로 어촌계(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2006), 향우회(정병은, 2007), 종친회(최우영, 2006a), 인력시장(정병은·장충권, 2006), 아파트주민(정재은, 2007), 교회(정재영·장정호, 2007), 동창회 및 시민 단체(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된 호혜성을 기초로 한 상승작용(시너지 효과)이 만들어지면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동력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한국의 경제 발전은 ‘강한 국가’의 재분배 메커니즘과 ‘강한 사회’의 일반화된 호혜성 메커니즘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주요 단어: 사회자본, 경제 발전, 발전국가, 일반화된 호혜성, 통합성, 재분배, 조직적 완전성, 상승작용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데 주류를 이뤄왔던 ‘발전국가’ 논의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의 역할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¹⁾’ 개념으로 재조명해보는 글이다. 권위주의 정권하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논의들은 대부분 국가론적 시각에서 ‘강한 국가의 시장 개입’ 혹은 국가의 ‘강압적 자원 동원 메커니즘’ 등에 주목하며 경제 발전을 설명하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은 국가 외부의 영역을 단순히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조직되는 수동적인 영역으로 파악한다. 그뿐만 아니라 분석의 대상을 국가의 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만 집중하여,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러한 국가 중심적 시각은 매우 심각한 편견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발전한 서구의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념형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덕

1)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설명은 류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2002)의 서장 참조. 일부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택에 식민지 상황을 벗어나고 연이어 엄청난 전쟁을 겪은 후 비로소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 ‘서구적 시민사회’ 혹은 ‘서구적 시장’을 찾는 일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었다. 따라서 국가를 견제하고 또 국가에 대항할 힘을 가진 세력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전제되었다.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국가의 외부에서 국가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 한국의 독특한 ‘비국가 영역’ 혹은 ‘사회 영역’²⁾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류석춘·장미혜, 2002a).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 제기는 결코 아니다. 탈식민지 국가에 대한 ‘발전 프로그램’이 봉착했던 문제, 다시 말해 근대화 이론이 부닥쳤던 문제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 사회를 모델로 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 이식한 발전 프로그램이 해당 국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자, 발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비로소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그 무언가가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Leys, 1996). 이들에게 분명해진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준비된 발전 계획만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부족한 그 무엇을 찾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회자본’ 개념이다(퍼트남, 2002: 132~133). 따라서 이 개념은 국가, 시민사회, 시장 등과 같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으로는 잔여 범주로만 치부될 뿐인 비서구적인 ‘사회 영역’의 능동적 역할과 가능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류석춘·장미혜, 2002b).

사회를 국가/시장/시민사회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할 때

2) 서구적 의미에서 ‘비국가 영역’ 혹은 ‘사회 영역’은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사회자본은 이러한 구분을 관통하며 존재하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인간관계의 패턴을 통칭한다(류석춘·장미혜, 2002b). 즉 사회자본은 공적/사적,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의 모든 활동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이윤 메커니즘 및 국가의 권력 메커니즘과 상호 작용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인간관계 메커니즘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자본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경제적인 시장의 기능을 더욱 잘 작동하게 만드는 (혹은 방해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고, 이 둘을 (불)가능하게 해주는 전제 조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나 시장과 같은 추상적인 제도는 항상 역사적으로 특정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유리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민주주의나 시장이 배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이야말로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이다(Myrdal, 1968; Putnam, 1993a; 퍼트남, 2002; Woolcock, 1998).

사회자본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서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최근에만 시작되었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퍼트남, 2002).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의 성과도 이제 막 축적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류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2). 특히 최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데,³⁾ 이는 바로 앞에서 지적한 ‘위로부터의 발전 프로그램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Schiff, 1999).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가 폭발적인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찬웅, 2006; 홍영란, 2006; 이상민·이용수, 200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에만 관심을

3) <http://go.worldbank.org/VEN70UW280>

기울이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연고 집단(緣故集團)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류석춘·장미혜, 2002a).⁴⁾ 그러나 이집게도 이 연구의 흐름은 아직까지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인간관계의 행위 패턴, 즉 연고라는 사회자본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시장이나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발전 문헌은 연고 집단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왔다. 혹시라도 연고 집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정적 효과를 거론하며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왔을 뿐이다(김성국·석현호·임현진·류석춘, 2004; 이재열, 1988; 2001; 이재혁, 1999; 2006; 2007).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한국의 경제 발전과 연고 집단의 동시적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바로 이 문제를 해명하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즉 이 글은 거시적 차원의 발전국가 논의와 미시적 차원의 연고에 대한 사회자본 논의를 연결시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경제 발전이 가능했는지를 재구성해보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발전국가 논의와 사회자본 논의가 서로 분리되어 같은 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측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한계들을 짚어본다. 다음에는 이를 결합시킬 수 있는

4)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의 연고라는 사회자본이 줄게는 한국(류석춘·장미혜, 2002a), 그리고 넓게는 동아시아(류석춘·김태은, 2002; 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음은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예컨대 중국의 독특한 인간관계인 판시(關係), 일본의 독특한 기업 경영 방식인 게이레츠(系列), 한국의 독특한 기업 조직 방식인 재벌(財閥) 등에 관한 연구는 모두 이러한 관심을 공유하는 작업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뿌리를 사회자본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최우영, 2006b; 전상인, 2007).

총체적인 이론적 틀을 거칠게나마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틀을 통해 지난 한국 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던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해석한다. 이는 ‘개인’ 차원은 물론이고, ‘집단 내부’와 ‘집단 간’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제도화시킨 ‘국가’의 역할에 주목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제시하는 발전론적 분석의 틀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전망하며 글을 맺는다.

II. 발전국가 및 사회자본 논의의 문제

1. 발전국가 논의의 문제

국가 중심적 논의 즉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설명해 온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들의 분석을 정리하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다름 아닌 ‘국가/사회 관계(state/society relation)’에 대한 이분법의 설정이다(Rueschemeyer & Evans, 1985; Skocpol, 1985; Mann, 1986; Migdal, 1988). 이들은 국가/사회 관계를 본질적으로제로섬 관계, 즉 국가라는 제도가 강력하면 나머지 다른 제도, 즉 사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시장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는 곧 국가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이기도 하다. ‘강한 국가(strong state)’는 ‘자율성(autonomy)’과 ‘능력(capacity)’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이는 결국 “사회적 지배적 집단들로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자율적으로 세운 과업과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정의된다(위스, 2002: 61).

한국의 발전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국가/사회의 이분법에 기초해 한국은 ‘강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왔다는 사실에 동의한다(Johnson, 1985; Amsden, 1989; Wade, 1990; 정운찬, 1998; 강철규, 1998; 조희연, 1998; 김동노, 1999; 최장집, 2002; Chang, 2006). 즉 한국은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연히 분류되어 왔다.⁵⁾ 이와 같은 전제는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논의에서 국가의 역할과 공헌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데 국가 외부에 있는 사회 영역의 공헌을 상대적으로 저평가 내지 무시하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 그리고 침투력을 가진 국가만이 존재하여왔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의 반대편에는 오히려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사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Cho, 1997; 안병직·이영훈, 2001; 류석춘, 2002; 최우영, 2006b; 전상인, 2007; 핫뜨리, 2007). 비국가 영역 혹은 사회 영역에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전통적인 조직 원리에 따른 집단의 구성과 관계 맺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를 국가와의 관계에서 ‘약한 사회’라고 분류할 수 없도록 한다.

그렇다면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은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의 사회적 관계망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 연고라는 이름 아래 활성화된 비공식 부문의 풍부한 사회자본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가? 유사한 발전전략을 구사한 다른 제3세계

5)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포지티브섬 관계, 즉 강한 국가 및 강한 사회가 공존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주장이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다(김명수, 1998).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는 없는가? 동일한 거시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속성, 즉 사회자본의 기능과 양식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Woolcock, 1998).

한국의 비공식 혹은 비제도 영역의 특수한 성격을 두고 ‘국가/사회’의 이분법에서 이를 ‘강한 사회’라고 규정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강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압당하여 비활성화된 ‘약한 사회’라고 규정하는 입장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이고 비제도화된 영역의 사회자본, 즉 연고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망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와 같은 제도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경제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왔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포지티브섬으로 바꿀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국 사회의 비공식적이고 비제도화된 영역에 축적된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다. ‘강한 국가’가 ‘약한 사회’와 반드시 짝을 맺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을 열어 둔다면(김명수, 1998), 또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강하고 자율적이며 능력 있는 국가만큼이나 그에 부응해서 협동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영역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퍼트남, 2002), 이제는 발전국가적 이분법이 상정한 한국 사회에 대한 선형적 가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한 때이다.

과연 한국의 ‘사회’는 단순히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수동적인 모습

6) 예컨대 재벌이라는 기업의 조직 방식도 연고에 기초하고 있고(참여연대, 2005),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시민 단체 또한 연고에 기초한 조직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류석춘·왕혜숙, 2006).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도 이를 실현하는 조직의 방식이 모두 연고에 기초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만을 보이는가. 아니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경제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주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연고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한국 사회의 자율적인 동원과 협력 및 경쟁 메커니즘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연고라는 사회자본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2. 사회자본 논의의 문제

이제까지의 사회자본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미시적인 관계망 속에서 개인이 사회자본을 어떻게 축적, 순환, 재생산하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자본에 관한 경제사회학자들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⁷⁾ 이들은 특히 개인이 가진 ‘연결망(network)’의 속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집단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회자본을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은 결국 개인이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유할 수 있

7) 콜만의 사회자본 정의는 다음과 같다(Coleman, 1988: 93).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콜만은 사회자본의 ‘자본’적 특성에 주목하여, 개인이 특정한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또는 특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게 되고, 축적되고, 지원되는 자원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버트의 사회자본 정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사회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일반적인 연결망”이라고 정의한다(Burt, 1992). 포르테스 역시 사회자본을 “연결망 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희소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Portes, 1995).

는 집단의 자원을 가리킨다. 이들 연구의 중요한 준거는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집단의 사회자본을 활용한다는 사실이다(김용학, 1996).

이러한 경제사회학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 번째 문제는 울콕(Woolcock, 1998)이 지적하는 ‘발전의 상향적 딜레마’를 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발전의 상향적 딜레마는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집단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공을 달성한 이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지적하는 개념이다.⁸⁾ 즉 특정한 집단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 더 이상 활용할 사회자본이 없고, 그렇다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집단을 이탈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동시에 집단의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잃게 되는 현상을 꼬집는 개념이다.⁹⁾ 역설적이게도 토착적인 사회제도가 구성원들에게 재정적인 자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하는 데 성공적일수록, 성공한 이후에는 그러한 제도들이 개인에게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결국 “빈곤한 공동체에서 (개인의)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이라는 최초의 유리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동체를 넘어서는 확장적인 연계성 쪽으로 길을 터주어야” 한다(Woolcock, 1998: 254).

경제사회학적 관점의 두 번째 문제는 집단 내부에서 작동하는 사회자본을 집단 외부의 다른 집단 또는 제도와 맺는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자본과 구분 없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8) ‘사회적 부채(social liability)’라는 개념 역시 집단 내부의 강한 결속이 오히려 개인의 성공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하는 개념이다(박찬용, 2006: 66).

9) 예컨대 LA의 한국인 집단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집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 오래된 구성원들은 그들이 땀 흘려 이룩한 자산을 민족 공동체 일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것과 같이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여러 하위개념 가운데 특히 신뢰에 대한 접근이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 예컨대 집단 내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어떻게 다른 집단과의 신뢰 (혹은 갈등)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장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적 제도의 작동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은 신뢰만 있으면 집단 내부의 결속은 물론이고, 집단 외부와의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까지도 모두 확보된다는 단순한 가정이었다(Putnam, 1993a; Kenworthy, 2001; 야마기시, 2001; 김인영, 2002; 김우택·김지희, 2002; 이운죽, 2004; 김지희, 2007). 동일한 신뢰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경제적 성취는 물론 집단 구성원들 간의 성공적인 집합행동, 나아가서 집단 간 협력, 그리고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 완성까지 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회자본 혹은 신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¹⁰⁾

미시와 거시를 구분하지 않고 또 집단 내부와 외부에 작용하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자본 개념은 개인이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전유하는 미시적 행위가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한다. 나아가 국가마다 그리고 집단마다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미시적 사회자본의 형태와 성격이 어떤 식으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와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두지 않게 한다. 개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집단의 사회자본과 집단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회자본이 각기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경쟁을 또 어떤 경우에는 협력을 가져오는 지, 그리고 경쟁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는 보다 분명한 분석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10) 많은 경우 집단 내부의 신뢰는 집단 외부에 대해 협력보다는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야마기시, 2001).

III. 발전국가 분석을 위한 사회자본 개념의 재구성

기존의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는 사회자본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각 요소들 간의 논리적 연결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는 크게 보아 ‘신뢰’ ‘규범’ ‘연결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집약된다(최종렬, 2004). 이 요소들 가운데 ‘연결망’에 관한 논의는 경제사회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이론과 분석이 많이 진척되어왔다(김용학, 2003a; 2003b). 그러나 신뢰와 규범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신뢰이며, 어떤 규범인가에 관한 문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뭉뚱그려 진행되어왔을 뿐이다(이은죽, 2004; 김지희, 2007). 이런 맥락에서 최종렬(2004)의 논의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특히 신뢰와 규범에 논의를 집중시켜 그 실체를 인류학의 ‘호혜성(reciprocity)’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¹¹⁾

호혜성은 동기의 측면, 즉 개인이 교환에 임하면서 그 행위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합리화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런 만큼 호혜성은 실제 거래되는 자원의 절대적 양에 대한 평가를 준거로 하지 않는다. 오히

11) 기존의 사회자본 논의는 퍼트남(Putnam, 1993a)의 ‘포괄적 호혜성’이나 후쿠야마(1996)의 ‘일반적 신뢰’와 같이 모호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종렬(2004)은 사회자본 개념이 단일한 형태와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신뢰와 규범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의 유형화는 슈츠(Schutz, 1967)의 논의를 따라 신뢰의 종류를 배경적 기대와 구성적 기대로 나누고, 또한 샬린스(Sahlins, 1972)의 논의를 수용하여 호혜성의 종류를 일반화된 호혜성과 균형 잡힌 호혜성으로 구분하며 이루어진다. 따라서 익명의 한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본 논문이 사회자본과 일반화된 호혜성을 등치시켰다기 보다는, 사회자본의 한 하위 형태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일반화된 호혜성 외에도 균형 잡힌 호혜성으로 구성된 사회자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두 형태의 사회자본은 각각이 기능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중요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려 호혜성의 가장 중요한 준거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는가라는 도덕적 동기의 문제이다. 도덕적인 교환의 동기를 준거로 호혜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Sahlins, 1972). 첫째는 불완전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같이 자신만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부정적 호혜성(negative reciprocity)’이다. 둘째는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 즉 상대방과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이다. 그리고 셋째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비롯하여 타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이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불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부정적 호혜성’은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가장 비사회화적인 (혹은 가장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¹²⁾ 대신 이 논문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균형 잡힌 호혜성’에 주목하여 두 가지 형태의 규범적 사회자본에 관해서 검토한다. 먼저 일반화된 호혜성을 살펴보자. 이 규범은 교환에 참여하는 상대방은 물론 일반적인 타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이 규범을 따르는 행위자는 제3자의 무임승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반면에 균형 잡힌 호혜성은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¹³⁾ 이런 맥락에서 이 규범은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로 일컬어지는 ‘파벌의 해악(mischiefs of faction)’ 혹은 ‘도둑들 간의 명예(honors of thieves)’라고 불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Granovetter, 1985: 62; 퍼트남, 2002).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만

12) “부정적인 호혜성”은 자신만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self-interest’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은 개념이다.

13) 자유로운 개인 간의 ‘계약(contract)’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하면 제3자의 이해관계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집단 내부’와 ‘집단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차별적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울콕은 사회자본을 속성에 따라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 그리고 이를 다시 미시와 거시의 차원으로 각각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시적 수준의 배태성은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통합성’(c)이며, 거시적 수준의 배태성은 국가와 사회 사이의 ‘상승작용’(a)이다. 또한 미시적 수준의 자율성은 공동체를 벗어나는 외부와의 ‘연계성’(d)이고, 거시적 수준의 자율성은 국가 내부의 제도적 응집력과 역량을 드러내는 ‘조직적 완전성’(b)이다.¹⁴⁾

울콕(Woolcock, 1998)이 논의한 사회자본의 네 가지 유형을 집단 내부의 관계와 집단 외부의 관계라는 기준으로 재정리해보자. 거시적인 차원의 분석 단위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부의 조직적 완전성(자율성), 즉 **b**가 거시적 집단 내부의 사회자본이고, 국가와 사회의 시너지(배태성), 즉 **a**가 거시적 집단 외부의 사회자본이다. 이에 반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개별 집단이 분석 단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내부의 통합성(배태성), 즉 **c**가 집단 내부의 사회자본이고, 외부로 향하는 연계성(자율성), 즉 **d**가 집단 내부의 성원이 집단 외부와의 관계에서 갖는 사회자본이다. 따라서 집단의 내부와 외부라는 기준과 울콕

14) 울콕이 정리한 사회자본 유형(Woolcock, 1998: 235)은 다음과 같다.

	배태성	자율성
거시적 차원: 국가	a. 상승작용 사회와의 관계 (집단 외부)	b. 조직적 완전성 제도적 응집력과 역량 (집단 내부)
미시적 차원: 집단	c. 통합성 집단 내부의 관계 (집단 내부)	d. 연계성 집단 외부와의 관계 (집단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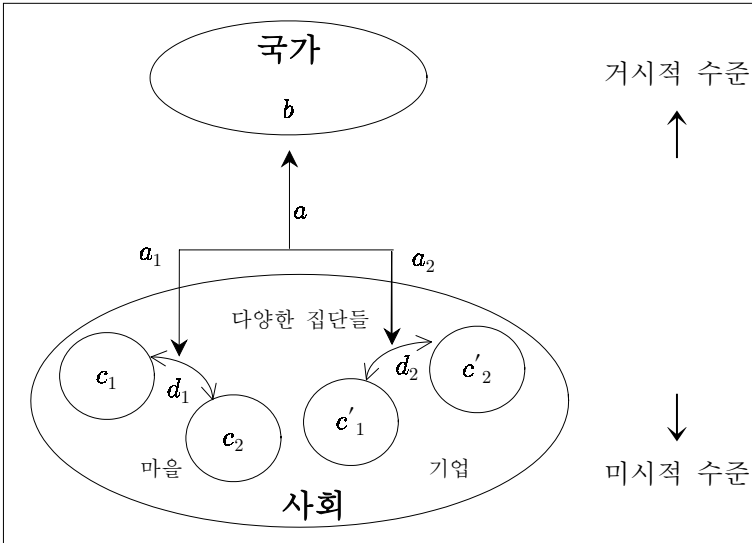
의 배태성과 연계성이라는 사회자본의 속성은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표 1>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 기초로 미시 및 거시, 그리고 내부 및 외부의 사회자본이 일반화된 호혜성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표 1> 사회자본의 구분 (미시와 거시 및 집단 내부와 외부)

	집단 내부	집단 외부
거시적 차원: 국가	b. 조직적 완전성 제도적 응집력과 역량 (자율성)	a. 상승작용 사회와의 관계 (배태성)
미시적 차원: 집단	c. 통합성 집단 내부의 관계 (배태성)	d. 연계성 집단 외부와의 관계 (자율성)

첫 번째로 미시적 차원에서는 집단 내부의 통합성이 개인의 성취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그림 1의 c).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공식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혈연/지연/학연 등과 같은 다양한 연고 관계는 과연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연고 집단의 규범이 개인에게 어떠한 내부적 긴장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또한 개인은 그러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등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나아가서 그와 같은 호혜성에 기초한 연고 집단의 규범이 내면화 된다면 그것은 과연 집단의 내부적 통합성을 높이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사이의 갈등을 매개하고 있는지도 규명해보아야 한다.

<그림 1> 네 가지 사회자본의 관계



두 번째로 거시적 차원의 집단 내부 사회자본, 즉 발전국가의 조직적 완전성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그림 1의 b). 제도적 수준에서 국가의 조직적 완전성은 관료 제도와 기구를 일관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발전국가는 어떤 규범에 기초해 응집력과 역량을 확립하고 이를 영속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국가기구의 제도적 배열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국가기구의 권위적 형태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발전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발전국가를 내부적으로 추동한 도덕적 규범이 과연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규범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은 어떻게 국가의 조직적 완전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다. 다시

말해 한국 발전국가 내부 구성원들의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지향이 무엇이었기에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국가는 부패와 무능에 포획되지 않고 발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해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자본을 가진 미시적 집단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그림 1의 *d*). 기본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집단 간 관계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협동 혹은 갈등 관계로 존재한다. 특히 강한 내집단 통합성은 외부 집단에 대한 불신과 폐쇄성을 강화시켜 집단 간 관계를 갈등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 전체 수준, 특히 외부 집단과의 관계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갈등 상황은 집단 내부의 차원에서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갖기도 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가 단결하기 때문이다.¹⁵⁾ 집단 외부와의 경쟁 상황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발전의 상황적 딜레마’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¹⁶⁾ 또한 강한 내부적 통합

15) 포르테스와 센센브레너(Portes and Sensenbrenner, 1993)는 사회자본 논의에 내재한 사회학의 이론적 전통을 네 가지 큰 흐름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1) 제한적 결속(막스와 엥겔스: 불리한 상황이 집단 응집력의 원천으로써 작동), 2) 호혜적 거래(짐멜: 인격화된 교환의 연결망을 통해 드러나는 규범과 의무), 3) 가치 투입(뒤르케임과 파슨스: 가치 혹은 도덕적 강제로서 현신이 계약관계보다 앞서며, 개인에게 도구적인 것 이상의 목표가 존재한다), 4) 강제할 수 있는 능력(베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외부의 영향력)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제한적 결속’ 개념은 사회자본이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약한 연대’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이 제한적 결속을 통해 ‘강한 연대’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6) 집단 간의 ‘경쟁’ 관계에만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일면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울록이 외부와의 연계성(linkage)을 통해 개념화하려고 했던 것은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대(weak ties)와 같이 내부 집단을 넘어서서 외부와 맺는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자유롭게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거래를

성에 기초한 집합행동은 ‘비도덕적 가족주의’와 같은 비효율과 저발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127).

마지막으로 이 글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집단 간 경쟁을 제도화한 국가의 역할이다(그림 1의 a).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어떻게 미시적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통합성과 상호 작용을 하여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간에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는 한국의 발전국가가 어떻게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동시에 강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국가의 재분배는 미시적 차원의 다양한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의 추구를 뛰어 넘어 국가가 베푸는 호혜성을 되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불어넣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특히 ‘전시적 의례(display rituals)’를 사용해 미시적 집단 간의 경쟁을 유도했다. 국가의 개입에 의해 매개된 미시적 집단 간의 경쟁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위 경쟁이야말로 역동적인 국가/사회 관계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¹⁷⁾ 여기서는 이러한 과정의 예로 마을 간(그림 1의 d_1) 그리고 기업 간(그림 1의 d_2)의 관계를 매개한 국가의 역할(그림 1의 a_1 및 a_2)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할 수 있는 서구적 시장 행위를 상징할 때 가능한 개념이다(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135). 서구와 달리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는 원자화된 개인의 자유로운 관계 맺음보다는 이미 사회에 배태되어 있던 집단 간의 관계가 국가 혹은 시장에 투영되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맺음을 매개하였다. 예컨대 핫포리(2007: 167)는 한국의 압축적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거가이촌(學家離村)이 아닌 단신이촌(單身離村)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에서 새로 형성된 중간층은 농촌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면서 농촌적인 가치 의식을 고스란히 유지하여왔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귀속감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 해체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어왔음을 뜻한다.

17) ‘전시적 의례’ 및 ‘지위 경쟁’ 등의 용어는 이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한 내부 토론회(2006년 1월)에서 최종렬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IV. 집단 내부의 일반화된 호혜성

1. 미시적 집단 내부의 일반화된 호혜성(그림 1의 c)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집단 내부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개인의 성취 지향성을 높이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였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혈연/지연/학연 집단과 같이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에 주로 존재하는 연고 집단의 규범은 무엇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집단 내부의 통합성을 확보해 나가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베버의 개신교 윤리 테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 논의한 논문 『한국 자본주의 정신과 유교 윤리』는 ‘효’라는 규범을 공유하는 친족 집단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경제적 추동력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이 글은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¹⁸⁾로 가득 찬 유교 문화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끝없는 축적 욕구를 자극하는 강력한

18)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위의 설명에서 베버가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통찰한 도덕적 합리화 과정과 유사한 메커니즘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베버와 다른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유교적 세계관은 종교성의 결여는 물론이고, 디오니소스적 요소나 긴장의 결핍 등 서구의 자본주의 발달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유교 윤리에서의 생업이나 부의 창출은 신사층의 영혼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여겨진다(베버, 1991). 이러한 세계관에 기반한 사회계층 구조에 의해, 국가는 공식적 기준을 통하여 문사 계급을 가장 상층부에 위치시켰고, 상인들을 가장 낮은 지위로 위치시켰다(류석춘 편, 1992: 198). 이러한 유교 문화에서, 개인의 경제적 행위 자체는 물론,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회자본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와 타인의 자원을 활용 및 전용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 안에서는 노동 윤리는 물론 노동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해줄 다시 말해 노동을 합리화하여 내적 긴장을 해소해줄 종교성도 찾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인 ‘효’ 규범은 친족 집단 내에 조상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라는 도덕적 의무감을 공유하도록 하여 이의 실현에 필요한 절차, 즉 제례(祭禮)를 적절히 소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에게 제례의 수행에 필요한 부의 축적을 객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특히 선대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발전적’ 압력, 또한 후대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계승적’ 압력, 그리고 이러한 계승과 발전의 노력이 현재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집합적’ 압력은 부의 축적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친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효’라는 규범을 공유한 공동체 속의 개인은 조상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라는 도덕적 의무와 그 구체적 실천인 효의 객관화 과정을 자신의 소명처럼 받아들인다. 또한 이러한 소명은 자신을 둘러싼 친족 공동체 전체에 대해 집합적인 도덕적 의무감을 확대재생산한다.

조상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라는 지상의 목적 앞에 도구로서의 자본 축적 및 활용은 단순한 수단으로 합리화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익의 추구는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일반화된 호혜성 때문이다. 이러한 호혜성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의 세속성을 도덕적으로 합리화시키며, 이는 자신의 세속적(경제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내적 긴장을 보다 큰 맥락, 즉 공동체 차원에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동기와 수단의 차원에서 효의 실천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부의 축적이라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경제적 동기의 차원이 발전적 재현의 압력으로 표현된다면, 계승적이고 집합적인 재현의 압력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으로 전화된다. 자신이 이룩한 경제적 성취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베풀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축적된 부는 나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으며,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후대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¹⁹⁾

이는 청교도들이 자신의 부의 축적을 현세에서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현세에 재현하는 수단으로 또한 자신은 그 위대한 신의 뜻을 실천하는 신의 도구로서 인식하였다는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개신교 윤리에서 부는 검약의 결과다. 즉 신의 섭리에 따라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의 부 역시 조상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재현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 따라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며,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전유를 위해 검약한 결과이다.

종친회, 향우회, 어촌계와 같이 혈연/지연/학연에 기초한 연고 집단에 관한 면접 조사 결과는 위 과정의 구체적 국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²⁰⁾ 종친회²¹⁾의 면접 조사에서 취재원들의 서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영달이 아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현

19) 이러한 집합적 재현의 압력은 친족 공동체 내부에서 복지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도 지적되고 있다(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144; 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20) 익명의 한 논평자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고 집단의 범주에 동창회 사례가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고 집단의 높은 내부적 통합성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고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공통의 이해를 위한 협동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집단들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필자들은 판단하였다. 어촌계에는 공동 어업이라는 집단 공통의 생산적 목표가 존재하는 반면, 동창회의 경우 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통의 목표 추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창회가 보여 주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특성에 관해서는 류석춘·왕혜숙·박소연(2008) 참조.

21) 면접이 이루어진 종친회는 선산(善山) 유씨(柳氏) 문절공파(文節公派) 종친회로,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이 대표적인 현조(顯祖)이다(최우영, 2006a). 미암 유희춘은 사헌부 대사헌, 홍문관 부제학 등의 벼슬을 지낸 조선 중기의 대표적 선비이며, 1567년부터 11년간 조선 시대 양반 가정의 일상생활을 사실대로 기록한 『미암일기(眉巖日記)』의 저자이다(정창권, 2003).

신의 부분이다. 또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지저분하고 굵은일을 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특히 미암과 같이 훌륭한 현조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부채 의식과 의무감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함을 드러낸다. 또한 미암 이후에 뛰어난 인재가 없는 것에 상당한 콤플렉스를 느끼는데, 이러한 압력은 후대에 더 나은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압력은 동시에 현조를 더욱 잘 재현하기 위한 압력으로 유물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미암이라는 현조를 중심으로 종친회 회원들 사이에 돈독한 끈을 맺어주는 도덕적 규범은 “(미암과) 관련된 손이라 하면 대부분이 똑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집합적 재현의 압력으로 나타난다. 앞서 말한 발전적, 계승적, 집합적 압력의 구체적 진술인 셈이다. 또한 활발한 종친회 활동을 자기 자신이 제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대목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을 자신의 삶의 심판자로 받아들이듯이 조상을 자신의 삶의 심판자로 받아들이는 종교적 태도와 유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향우회²²⁾ 역시 고향의 발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강하게 부여받는다. 향우회원들은 자신의 지역인 안동을 ‘유교의 메카, 독립운동의 메카, 양반의 고장’으로 재현하고, 그러한 재현의 이미지를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 내면화한다. 또한 향우회 내의 문제나 집합행동의 이탈자에 대해서 “그러한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나?”는 식으로 협동과 단합을 유도한다. 또한 출신 지역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은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통해 지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전달(계승적 재현의 압력)과 지역민 농축산물 판

22) 면적이 이루어진 향우회는 재경안동향우회이다(정병은, 2007).

매 등 이익 사업에 있어서의 상부상조(집합적 재현의 압력)로 나타난다. 또한 안동 출신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영가회(永嘉會)의 경우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이 어려운 집단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다. 그 까닭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집합적 재현 압력에 의한 일반화된 호혜성 때문이다.

어촌계²³⁾ 또한 이와 유사한 규범의 내면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촌계에 대한 자부심, 다시 말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범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향우회가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어부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모범 어촌계원으로서 서로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²⁴⁾ 또한 공동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계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집합 의식도 강하게 보여준다.

위에서 예로 든 세 집단 모두에서 도덕적 의무감의 공유는 집단 내의 공통의 규범을 내면화해가면서 집단의 통합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내면화된 규범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통해 내부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의 통합성이 어떻게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가. 개인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자

23) 면접이 이루어진 어촌계는 울산 주진동(朱田洞) 어촌계이다(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2006).

24) 특히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것은 흥미롭다. “인제 계원으로서 서로가 어부 생활도 어부 생활이고, 계원도 계원이지만, 다 같은 동민이니까 서로가 도움을 줘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일반 농사짓는 사람보다 …… 머리가 좀 앞서 가 있고, 신경 써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모범이 된다고 해야겠지. 고기는 머리 둔한 사람이 못 잡고 이러니까.”(어촌계원 최OO 인터뷰)

본은 물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공공재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²⁵⁾ 위의 각 집단들이 보여주는 높은 통합성과 공동 이익에 대한 헌신은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시켜 단기적으로는 개인 이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듯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단기적인 계산 합리성에 의해 공공재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어촌계의 경우, 불법 포획을 하고 치어를 잡는 등 단기적으로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유일한 공공재인 어장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는 물론 자신의 이익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어촌계의 높은 통합성과 도덕적 규범은 이러한 공공재 파괴를 미연에 방지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도구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규범이라는 완성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공통의 도덕적 규범에 의해 증대된 집단의 통합성은, 개인에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되는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도록까지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은 높은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의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며, 그것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도 일치할 것이라고 믿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 결국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호혜적 실천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

25) 이는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오스트롬(Ostrom, 1990)이 시장과 국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CPR(Common Property Regime)과 흡사하다.

은 결과로서 사적 이익의 장기적 극대화도 가져온다.

향우회도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파괴를 도구적 방식이 아닌 완성적 방식으로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향우회는 그 특성상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예컨대 이들은 선거가 있을 때 지역 출신 특정 인사의 청탁이나 부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규범으로서 내면화한다. 어차피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이 지역 출신 후보가 나오는 것이 뻔한 상황인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분란은 향우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향우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들이 상실될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중립 유지 노력이 공공재 파괴가 가져올 이익 상실에 대한 도구적 계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사실이다. 즉 유교, 독립운동, 양반, 개화사상으로 대표되는 안동의 사람들이 어찌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원칙에 대한 호소를 통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강력한 도덕적 규범은 의식 또는 무의식에 내재해 나타날 수 있는 계산적 합리성에 기초한 자신의 이익에 스스로 무관심하게 만든다.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이러한 도덕적 규범은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의 상충을 해결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²⁶⁾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선(善)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는 이익에 관한 계산 자체에 무관심하도록 하는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다. 동일한 규범을 공유하

26) 시민사회는 가족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제도 집단을 뜻하며, 시민사회 내부와 시민사회를 통해서 공론장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선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려고 시도한다”(Woolcock, 1998: 207).

는 공동체는 개인에게 규범의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 계승적, 발전적, 집합적 압력이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으로 나타난다. 강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며, 이는 역설적이게도 공공재의 보존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도 한다.

2. 거시적 국가 내부의 일반화된 호혜성(그림1 의 b)

많은 학자들이 한국 발전국가의 특이성에 주목하면서 높은 국가 자율성 및 역량과 경제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Wade, 1990; Kim, 1997; Chibber, 2002; 이기준, 2005; 류석춘·왕혜숙, 2007). 이들은 특히 국가 관료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했던 제도의 응집성과 권위의 배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가 제도적 문제에 집중된 만큼, 국가를 구성하는 관료들이 공유하고 있던 규범적 지향이나 가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료제의 제도적 배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앞서 지적했듯이 공식적인 제도를 뒷받침하고 그것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국가 구성원의 규범과 같은 거시적 사회자본의 역할을 간과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애초에 강한 국가의 형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예컨대 “강력한 정부가 관료적 자율성을 애당초 어떻게 획득했으며 뒤이어 다른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기 마련인 자기 극대화나 자기 이익만을 차리는 형태가 된 것이 아니라 개발을 목표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김형아, 2005: 132). 이 문제는 관료 집단 내부 구성원의 동기와 규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 발전국가 관료 집단 내부에 공유되고 그들의 내부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도덕적 규범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많은 문헌들이 한국 발전국가의 특성을 ‘규율을 통한 지원’으로 꼽고 있다(Kim, 1997; Chibber, 2003; Shin & Chang, 2003; 류석춘·왕혜숙, 2007). 이러한 규율은 엄격한 능력주의 관료 제도 및 이를 통해 성립된 관료 집단 내부의 응집력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 혹은 사회 영역에 대한 통제와 동원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규율은 단순한 행정적 지침이나 제도적 장치의 수준을 넘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국가 관료들의 행동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있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왜 유독 한국, 그중에서도 특정 시기의 한국, 즉 박정희 시대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식민지적 유산’(Kohli, 2004)이나 ‘유교적 전통’(Berger, 1988; Song, 1990; Clegg, Higgins, & Spibey, 1990; 류석춘, 1997a; 국민호, 1999) 때문이라고 치부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견해는 왜 하필 그것이 박정희 시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작동하였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 국가 관료의 이와 같은 규범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

27) 이런 맥락에서 한국 관료 집단 내부의 규율은 단순히 위로부터 강제된 규율이라기보다는 규범이 자율적으로 내면화된 ‘규율적 에토스(disciplinary ethos)’라고 보아야 한다. 규율적 에토스란 개인이 생산 활동에 임하면서 스스로 부여하는 일정한 정도의 엄격성과 자기 통제를 말한다. 특히 데이비스는 이러한 형태의 규율적 에토스가 사회와 국가 모두에 확산되어 있어야 발전적 목표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Davis, 2004: 11).

답을 데이비스(Davis, 2004)는 박정희 정부 내부의 관료 집단이 공유하고 있던 ‘농촌 중간계급 지향성’에서 발견한다.

1961년 쿠데타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상층이 아닌 중간계급, 특히 농촌 중간계급 출신이 국가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와의 연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권력의 주된 거점으로 삼은 이승만과 달리, 박정희는 농촌 중간계급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를 권력의 발판으로 삼았다(류석춘·이우영·장덕진, 2002). 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부정하며 등장한 군사정권은 당시 곤경에 처해 있던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도시보다는 농촌의 정서에 의지하여 쿠데타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특히 박정희는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자연스러운 부지런함과 규율적인 생활 태도를 당시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보여주고 있던 사치, 허영, 과소비, 부패를 대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치로 여겼다. 농촌 중간계급은 근면하고, 자기 규율적이며, 자신의 소비를 자제할 뿐만 아니라, 저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생활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촌 중간계급의 규율, 엄격, 근검과 같은 규범은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앞서 살펴본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신적·심리적 지향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Davis, 2004: 106).

박정희 정부의 이와 같은 규범적 지향은 그 유명한 ‘수출 지향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동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수입을 통해 불필요한 사치를 즐기던 당시의 지배층, 즉 상업 부르주아나 지주계급의 소비를 억제하고, 대신 인구가 넘쳐나는 농업 부문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특히 박정희는 당시 농촌의 문제가 대부분 욕심이 지나친

금융기관과 고리대금업자들이 농촌의 가난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농민들의 인식을 공유했다. 박정희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자본가들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도덕적 근면성을 실천하는 농민들이나 기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Davis, 2004: 99).

건전한 국가 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적 여망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박정희는 다른 무엇보다 자립과 자조가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근면, 절약, 검소”라는 농촌 중간계급의 규범을 받아들일 때 확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박정희는 농촌 중간계급의 ‘규율적 에토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농촌 중간계급의 규율적 에토스는 박정희에 의해 자본가와 지주계급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하는 도덕적 지침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박정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규율적 에토스를 출선수범의 차원에서 국가의 관료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요구했다(Davis, 2004: 97).

박정희의 이러한 규범적 지향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제 관료들은 스스로를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규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료 집단은 모두 스스로에 대한 규율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발전을 통해 국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공통된 신념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헌신과 규율의 실천은 관료 각각의 개인과 가족에게도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김성진, 1994; 김정림, 1997). 결국 이들은 모두 국가가 번영해야 개인도 번영한다는 국가주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었다(김형아, 2005). 이러한 신념의 근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 큰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완성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앞서 미시적 집단 내부의 사회자본 분석에서 발견되던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 거시적인 국가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규율이 없는 방종이나 무능력은 곧 국가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이었고, 이는 도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료들은 근면, 절약, 검소 등의 금욕적 태도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능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업적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는 발전국가 시기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료 제도 개혁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²⁸⁾ 관료 개혁은 철저한 능력주의적 기술 관료의 충원과 무능력한 관료의 퇴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었다.²⁹⁾ 동시에 훈장 및 포상 등과 같은 방식으로 관료들의 업적을 보상

28) 박정희는 관료적 행정력이 국가 재건을 달성하는 데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Davis, 2004: 106)

29)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10월 광범위한 행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1961년 상공부 조직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관료 제도가 공업 발전을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처 내 대부분의 주요 직위는 행정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기술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상공부의 철저한 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국가기구들은 우수한 능력의 기술 전문가, 즉 테크노크라트들과 젊은 엘리트 기술자들 그리고 연관된 분야 특히 상업이나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 24만 명 중 6분의 1이 해고되었다. 능력주의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초기 경제기획원 장관의 잦은 교체에서도 드러난다. 경제기획원이 설립된 1961년 7월부터 1964년 5월까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곱 차례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교체되었다. 이는 관료의 무능력은 곧 즉각적인 퇴출의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1963년 공무원의 승진이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능력주의 관료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일영, 2004). 충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엘리트적 특성은 기술 관료적 능력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 제도와 결합하여 더욱

하는 다양한 방법도 도입되었다.³⁰⁾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관료 개혁은 철저히 능력과 업적이라는 준거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관료 집단은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동시에 높은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규율에 대한 신념은 발전국가 내부의 관료들 간에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상호 신뢰를 가져왔고, 국가는 이를 기초로 높은 응집력을 행사하며 국가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관료들은 개인적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회자본을 실천하는 집단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범을 공유하고 서로 높은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간 국가는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고 사회를 동원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 ‘약한 사회에 기반한 강한 약탈 국가’가 아닌 ‘강한 사회에 기반한 강한 발전국가’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강한 통합성이라는 사회자본을 지닌 거시적 집단과 미시적 집단,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상호 작용이 있었기에 시너지를 생성하고 발전을 향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강화되었고, 이는 관료제 내부의 결속을 더욱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특히 유신 기간에 행해진 ‘서정쇄신’이라는 관료 제도 개혁은 능력과 업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외에도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여 내부 통합력 강화를 이루었다. 서정쇄신 프로그램하에 정부는 소위 ‘계열 연대 책임제’와 ‘쌍벌제’를 도입했다. ‘계열 연대 책임제’란 공동 책임제로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그 상사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였다. 이 제도 아래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1만 7,562명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처벌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공공 업무를 맡았던 11만 9,0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고도의 기술과 자격을 요하는 선별과정을 통해 선택된 집단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관료들 간의 특정한 동질적 문화를 형성하고 이는 다시 국가 응집력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Chibber, 2003: 20).

30) 1976~77년에 총 15만 9,726명이 이 같은 포상을 받았다. 이는 당시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1978년 3월 말 전체 공무원(51만 9,000명)의 30.8%에 달하는 수치였다(김형아, 2005: 256).

V. 미시적 집단 간의 경쟁과 국가의 재분배

1. 마을 간의 경쟁과 국가의 재분배: 새마을운동(그림 1의 d_1 과 a_1)

미시적 집단 내부의 높은 통합성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부의 축적을 위한 집합행동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넘어서 타 집단과의 경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외부 집단과의 경쟁 상황은 공동체에 위기와 위협의 요소로 인식되며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내부 결속을 가능케 한다. 한국 사회의 특징은 이와 같은 집단 간 경쟁이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경쟁의 틀 속에서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사회자본을 통한 경쟁이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례는 ‘새마을운동’이다.

1970년대 농촌 근대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³¹⁾ 그 가운데 많은 논의가 새마을운동의 강압적 측면보다는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예컨대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제공한 경쟁의 장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잠재적 이익 실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나타난 집합적인 상호부조적 행위라는 해석이다(브란트,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좌승희, 2006). 여기서도 새마을운동의 경쟁적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해엄을 치든지, 빠져 죽든지’ 하라는 새마을운동의 전략은 농촌 마

31) 부정적인 견해로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자율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된 근대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결과 도농 간 격차는 물론 빈농과 부농 사이의 격차 역시 더욱 증대되었다는 주장이다(박진도·한도현, 1999).

을을 자구 노력 수준에 따라 세 단계(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하였다(박진환, 1987). 정부는 주로 자조마을과 자립마을을 선별해 지원했고, 게으르거나 자립 의지가 결핍된 마을은 원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재분배 전략은 정부 주도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김형아, 2005: 231~232). 또한 목표를 달성하여 단계의 상층으로 이동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이 뒤따랐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경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된 1971년 국가는 전국 3만 3,267개 행정리동(行政里洞)에 시멘트 300포대씩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무상으로 지급된 시멘트는 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시멘트로 어떤 마을은 도로 포장이나 하수도 사업 등 마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한 반면, 어떤 마을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낭비했다. 정부는 무상으로 지원받은 시멘트에 스스로 자체 자금과 협동 노력을 추가하여 성과를 낸 1만 6,600개 마을에 대해 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무상으로 추가 지원했다. 새마을운동은 이처럼 경쟁적, 선별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김성동, 2002).

특히 동족 집단 세 개가 합쳐진 자연부락 마을의 새마을운동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는 동족 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85). 세 성씨 동족 집단들로 구성된 이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과 달리³²⁾ 새

32) 대부분의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 이장의 추천을 마을 회의에서 승인받는 형식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새마을 지도자에게 제공된 특혜는 1) 새마을 지도자의 발골, 2) 새마을 통신엽서를 이용해 관계기관에 새마을사업에 관한 질의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일반농가에 우선한 영농자금 용자알선, 4) 새마을사업

마을 지도자가 후보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선출되었다. 왜냐하면 동족 집단 사이에 일종의 자존심 경쟁 심리 같은 것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길을 내는 등과 같은 공동 사업에 토지를 희사해야 할 때에도 다른 마을에서는 개인적 이익과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던데 반해, 이 마을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세 성씨 동족 집단 사이의 경쟁과 잠재적인 갈등 관계가 특정한 동족 집단 내부에서는 다른 동족 집단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해당 농가로 하여금 토지를 희사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설득 과정도 “누구는 희사했다. 당신만 남았다”는 식으로 이루어졌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62).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경쟁의 틀 속에서,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사회자본은 일반 농가들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어려운 빈농이나 비농가도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 농가로 하여금 ‘기부’라는 형식으로 토지의 무상 제공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공동 사업을 둘러싼 마을 주민 내부의 갈등을 잠재화시키고 그것이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향우회, 종친회, 어촌계의 집단별 조사에서는 면접의 내용이 타 집단과의 경쟁 관계를 초점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은연중 다른 집단과의 경쟁 관계에 대한 인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산 유씨 종친회의 경우 가짜 족보를 둘러싼 선대 문제 정리 과정에서 혈통에 대한 경쟁의식이 잘 드러난다.

관련 여행시 운임할인, 5) 자녀들의 장학금수령 기회의 우선적 제공, 6) 공직 특채기회 부여, 7) 전화가입 청약시 우선순위 배정 등이었다(이만갑, 1984: 78).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농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었으며,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을에 대한 봉사의 태도로 새마을 지도자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반사였다. 한 주민은 새마을 지도자 추천을 받아들여 부인한테 구박을 받을 정도로, 새마을 지도자라는 직책은 사실상 부담이 되는 자리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53).

즉 자신이 현조를 잘 재현하지 못한다는 부채감과 의무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종원들의 호혜적 협동을 이끌어내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미암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율곡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끼는데, 이는 자신들이 현조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으로까지 전화된다. 이는 현조를 더욱 잘 재현하기 위한 유물관 건립이나 서적 편찬 등의 발전적 재현의 압력으로 연결되면서, 종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 동원을 만들어낸다. 결국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자본이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이 국가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 측면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새마을운동에서처럼 유물관 건립 지원이나 표창을 통해 비제도화된 영역의 경쟁을 유도하는 재분배 장치를 제도화한다.³³⁾ 국가가 마련한 경쟁의 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자본을 동원하여 경쟁에 참여하는 집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원이 분배된다. 어촌계의 경우 대통령 표창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향우회의 경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과 같은 국책 사업을 맡아오는 과정이 그러하였으며,³⁴⁾ 종친회의 경우도 유물관 건립이 국가의 절대적 보조에 의해 진행되는 사실³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가는 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이 스스로의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쟁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가 거시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의 자원을

33)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기업의 지위 경쟁과도 맥을 같이한다.

34)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은 향우회 자체의 기부금과 국가 예산 85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다(정병은, 2007).

35) 미암 유물관 건립의 총비용은 38억 원인데, 10%는 문중에서, 나머지는 국가, 도, 군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우영, 2006a).

차별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결국 앞의 <그림 1>에서 보았던 미시적 집단 내부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자본이 국가의 제도적 개입으로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결국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경제 발전은 국가의 재분배 메커니즘과 사회의 일반화된 호혜성 메커니즘이 상호 결합해 만들어낸 시너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³⁶⁾

2. 기업 간의 경쟁과 국가의 재분배: 수출 및 산업 정책(그림 1의 d_2 와 a_2)

기업집단 즉 재벌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충분히 혹은 과도하게 연구되어왔다(Kohli, 2004). 그러나 그 관점은 다분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의 지배 구조와 발전 전략, 친족 중심 경영 체제의 효과 등과 같은 내부적 관점(조동성 외, 2003; 장세진, 2003; 김은미·장덕진·그라노베터, 2005) 혹은 국가 및 금융자본과의 연합이라는 외부적 관점(Amsden, 1989; Wade, 1990; Kim, 1997; 조희연, 1998; 이병천, 2003; Shin & Chang, 2003) 등에 의해서만 접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연구는 모두 재벌과 발전국가라는 독특한 구조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의 연구는 국가가 기업에게 자원을 자의적으로 재분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경 유착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의 자의적 배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정경 유착

36) 폴라니는 경제의 통합 형식을 호혜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교환(exchange)으로 나눈다(Polanyi, 1957).

과 부패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수입 허가 와 외환의 할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인들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는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장세진, 2003: 49). 그렇다면 정경 유착이라는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정권이 극명히 다른 경제성장의 모습을 보인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류석춘, 2006). 이는 단순히 국가와 재벌의 관계로 회귀될 수 없는 부분이다(Chibber, 2003). 국가와 재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에 의해 실행된 국가 ‘특혜주의’라는 새로운 기준의 시작은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특혜의 수혜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들은 시장의 성과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했다(Amsden, 1989: 14, 145~7; Chang, 2006). 또한 정치적 연줄이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국가의 지대 허가(rent-granting) 게임에서 궁극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었다(Wade, 1990: 285; 류석춘, 2006). 만약 그들이 비생산적이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박정희는 주저하지 않고 특혜를 회수하거나 대체하였다(이병천, 2003: 121). 성과가 나쁜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여 다른 기업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되는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장세진, 2003: 51; 좌승희, 2006). 그 결과 1960년대 10대 기업과 1972년의 10대 기업은 매우 극심한 변동을 겪는다(공병호, 1993). 이러한 국가의 시장 조정 기능, 다른 말로 ‘시장대체적 개입’은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압도하는 효율성으로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왕혜숙, 2004).

그러나 한국의 지난 경제성장은 이러한 국가의 시장대체적 조정 능력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애초에 국가의 시장대체

적 개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 문제 역시 사회자본의 일반화된 호혜성을 고려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수출 지향적 산업화’ 혹은 ‘시장대체적 국가 개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박정희는 농촌 중간계급의 규범을 지향하는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활용하였다. 박정희와 군부 세력에게 소규모 농민들의 규율은 국가의 전반적인 변화의 축일 뿐만 아니라 지배의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기반이었다. 이는 특히 국가가 노동은 물론이고 왜 그렇게 자본을 규율하고자 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은 국가 경제의 자립에도 중요했지만, 국내의 자본축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농업 자급도가 낮은 상황에서 농업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수출 지향 공업화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농촌 중간계급과 국가 관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도덕적 규율을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Davis, 2004: 98).

이러한 도덕적 규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정 축재자 처리 과정이다. 박 정권은 1961년 6월 14일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명의 주요 기업인을 ‘부정 축재’라는 혐의로 체포한다. 그러나 체포되었던 주요 기업인들은 “정부가 국가 건설을 위해 요구할 시에는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동의서를 쓴 뒤 풀려났다.³⁷⁾ 즉각적인 처벌이나 부정 축재 재산의 몰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그들은 국가에 대한 부채감과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받았다(김형아, 2005: 142).

부정 축재자 처리 과정은 국가가 진시적으로 호혜성을 베푸는 대표적 인 모습이었다. 부정 축재자들을 처벌 없이 방만한 것은 물론이고, 이 후 국가에 대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 의 제공과 같은 자원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대신 기업들은 국가가 베푸는 호혜성을 되갚기 위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야만 했다. 국가가 특정 기업에게 준 특혜는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기업에게 베푸는 일반화 된 호혜성이며, 그렇기에 기업은 박정희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받은 호혜성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호혜성을 되갚아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가 한 사이클 완성되면, 국가는 다음 단계에서 보다 많은 보상 과 특혜를 기업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시 호혜성을 되갚도록 하였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기업은 단순히 도구적인 차원에서 정치자 금과 특혜로 유착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감으로 묶여 있었다.³⁸⁾

37) 이러한 동의는 곧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1961년 8월 ‘부정축재특별처리법(개정) 제18조 2항에서 “(부정이득자로서) 국가 재건에 필요한 공장을 건설하여 그 주식을 납부코자 하는 자는 각의의 심의를 거쳐 내각 수반이 승인하는 기한, 기타 조건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 이내에 공장을 건설하여 그 주식 중 부정 축재 통고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부정 축재 통고액에 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제개발계획에서 구상한 사업들을 부정 축재자들로 하여금 건설케 하였기 때문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8) 물론 국가의 산업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기업들, 즉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베푸는 호혜성을 되갚지 않는 기업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부정 축재자 가운데 김성룡(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 함창희(동립)는 공장 건설 해당자로 되지 않아 부정 축재액이 강제 징수되면서, 기업을 몰수당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49). 서구의 시장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국가의 개입이다. 이런 국가의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했기

이런 맥락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가와 기업 관계는 정치자금과 특혜로 유착된 시장적 교환관계로만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국가와 기업의 유착이 정치자금과 특혜라는 두 재화의 등가 교환을 핵심으로 한 ‘균형 잡힌 호혜성’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일반화된 호혜성’을 핵심으로 한 사회자본이 매개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했다. 시장의 논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의제가 떠오를 때마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 간의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호혜성이나 계산적 합리성에 기초한 도구적 교환관계만으로는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들 사이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즉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완성적인 동기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방위산업 진출이나 조선 산업 진출이 그러한 예이다. 사업 수익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위산업에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 이익을 위하여 참여한다.³⁹⁾ 또한 조선 경기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한 기업에게 조선 사업을 억지로

때문이 아니라, 호혜성을 되갚지 않았기 때문에, 즉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셈이다.

39) “방위산업담당 수석비서실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기에 대한 국내 수요에는 한계가 있고 제품에 대한 검사는 매우 엄격한 반면 이윤은 낮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내 대기업들 중 방위산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 따라서 앞서 열거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총 84업체가 애국심에서 방위산업에 참여했다.”(김정렴, 1997: 107) “방위산업을 80여 개 분야로 나누어 건설할 때, 기술적으로 어렵고 투자도 많이 드는 분야는 자연히 대기업에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은 끝끝내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현대, 대우, 기아 등은 기업의 손익을 초월하고 국가적 요청에 부응해서 기술적으로 어렵고 투자도 많이 드는 것을 맡아 해내주었습니다.”(김성진, 1994: 103~104)

맡겨서 손익을 초월한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사례들은 시장적 교환관계나 균형 잡힌 호혜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가 베푸는 호혜성을 적극적으로 되갚은 기업들은 국가가 베푸는 더 많은 보상을 되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호혜성의 선순환 속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⁴¹⁾

또한 기업의 정치자금에 대한 정권의 태도에서도 일반화된 호혜성의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반대급부가 따르는 돈은 받지 않는다”(김정림, 1997: 240)든지, “함창회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서울-함포 도로 닦는 데 사용되었다”(김성동, 2002)는 당시 정치인들의 진술은 박정희 정권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 비해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균형 잡힌 호혜성에 터한 거래 관계나 도구적 교환의 성격을 지닌 정치자금에 대한 경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에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베푸는 일반적 호혜성에 기초한 정치자금만을 용인했다는

40) “1978년 가을 미국 뉴욕에 가 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옥포조선소 건설공사가 대우에 맡겨졌다는 통보였다. ‘그럴 리가 없어.’ 김우중은 출국 전에 남덕우 부총리와 만나 ‘저는 조선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라고 사양했다. 당시 조선 경기는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재벌들은 옥포조선소를 맡기 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 부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선정하셨기 때문에 당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소. 아무튼 미안하오’라고 말했다.”(『한겨레』 546호)

41)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런 존경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곤란한’ 부탁을 해결해주기도 했다. 71년 12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부터 판문점까지의 40km의 도로를 40일 만에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다. 72년초 북한 대표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온다는데 개성-판문점 도로는 시멘트로나마 포장돼 있는데 우리 도로는 포장이 안되어 있었다. 현대건설은 즉각 공사에 착수해 단 40일 만에 도로와 교량 등을 모두 완성시켜 박 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도로를 ‘통일로’로 명명했다.”(『문화일보』 2005년 8월 19일)

뜻이며,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정권의 정치자금과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의 의미를 차별화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을 추동시킨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강한 국가와 재벌 간의 도덕적 유착 외에 재벌들 사이에 존재한 “호혜성을 되찾으려는 지위 경쟁”이다. 박정희 정권은 수출에 공헌한 기업에 상을 주는 제도를 통해 기업들 사이에서 지위 경쟁을 이끌어냈다. 지위 경쟁의 핵심은 “전시적 의례(display rituals)”에 있다. 전시적 의례를 광범하게 사용하면 이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으로 호혜성의 핵심은 명예이며, 경제적 이익은 이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지위 경쟁과 전시적 의례를 통해 기업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 역군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⁴²⁾

지위 경쟁과 전시적 의례의 대표적인 예로 산업훈장 제도를 들 수 있다. 산업훈장은 이전에 있었던 훈장 제도를 5.16 이후 1963년 새로이 정비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전의 국가 훈장은 건국공로훈장이나 무궁화훈장처럼 국가의 안보나 존립과 관련된 부분에만 존재하였다.⁴³⁾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산업 부문에 대한 훈장을 이례적으로 신설함으

42) 강력한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도덕 경제’의 개념은 거의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행위에 대해 규범적이고 경제 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스콧, 2004; 김은미·장덕진·Granovetter, 2005).

43) 한국의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 시대인 1900년 공포되어 7가지의 훈장을 제정한 칙령인 훈장조례에서 비롯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훈장 제도가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각종 훈장 및 포장이 종류별로 공포·시행되었으며,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이 기존의 훈장령 및 포장령을 통합하여 최초로 상훈법을 공포·시행했다. 이 법은 모두 3차례에 걸친 개정(1967년, 1970년, 1973년)을 거쳐 현재의 상훈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 이전에는 건국공로훈장령(1949. 4.27)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제국말 훈장조례 이후 새로운 상훈 제도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무궁화대훈장령(1949. 8.13), 무공훈장령(1950. 10.19), 포장령(1949. 6.6)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로써 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을 지위 경쟁으로 전회시켰다. 또한 ‘수출의 날’⁴⁴⁾ ‘상공의 날’⁴⁵⁾ 등을 지정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 이들에 대한 전시적 의례를 제도화한다.

바로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터한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 나타난 시장 대체적 국가, 나아가서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설명해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과수꾼으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끝내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또한 자본가계급으로 하여금 국가의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가 제도화한 지위 경쟁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반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Chibber, 2003: 83) 이는 결국 한국의 발전국가가 약탈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다.

44)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치러 오다가, 1987년부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른다(KTV 국가기록영상관).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45) ‘상공의 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 및 국내 상공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964년 5월 12일 처음 지정하여 시작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30일 상공인의 날(10. 31), 발명의 날(5. 19), 중소기업의 날(5. 14), 계량의 날(10. 26), 전기의 날(3. 30) 등 상공 관련 5개 기념일을 통합하여 행사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고 유공 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포상을 실시하였다(행정자치부 홈페이지).

VI. 맺는말

모든 후발 산업국가들은 나름의 발전 전략을 취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국가가 자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인가, 또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성취 지향성이 낮기 때문인가. 혹은 권위주의 정부형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잘못 설정된 발전 전략 때문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회자본의 일반화된 호혜성의 개념을 빌려 대답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발전국가 전략의 효율성도 아니고 대규모 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이라는 기업 조직의 효율성도 아니었다. 국가의 높은 자율성과 역량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국민의 강한 성취 지향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의 태도를 내면화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강한 내부적 통합성을 유지한다. 이는 집합행동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재 파괴를 방지하고 개인은 물론 집단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회는 결코 ‘약한 사회’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일반화된 호혜성에 터한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는 국가의 조정 없이도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고 협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내부적 메커니즘을 가진 강한 사회였으며, 결코 ‘연고’라는 집단 논리에 간혀 부정적 외부 효과만을 만들어내는 비효율적인 사회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집단과의 경쟁 국면은 공동체를 강한 유대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국가 또한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초해 집단 간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에 발전을 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국가에 의한 경쟁의 제도화는 집

단 간의 경쟁이 집단 대 집단의 무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공선이라는 도덕적 목표에 복속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투쟁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 결과들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도덕적인 지위 경쟁의 틀을 제도화하여 시장 행위자들을 단기적인 자기 이익만을 좇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닌 공공선을 실현해가는 행위자로서 도덕적으로 재규정하였다. 이것이 재화와 화폐가 교통하는 시장의 교환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한국의 경제 발전의 숨겨진 이면이다.

퍼트남은 국가의 개입이 사회자본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그 예로 미국의 빈민촌 정책을 든다(Putnam, 1995). 그에게 국가의 능력과 효율은 사회 영역에 축적된 사회자본이 어떠한가에 의해 성패 여부가 결정되는 종속변수로 파악될 뿐이었다. 그는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구성원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오히려 국가는 부차적인 존재로 치부된다. 이런 맥락에서 퍼트남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가 보여주는 정부의 유능함과 무능함은 두 지역이 가진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의 결과로 진단한다(Putnam, 1993a).⁴⁶⁾ 그러나 역으로 두 지역 정부의 서로 다른 특성이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 또는 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것(Making Democracy Work)이 사회자본일 수도 있으나, 그 역으로 사회자본을 작동하게 하는 것(Making Social

46) 퍼트남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단순히 사회자본의 존재 여부의 문제로 정의한다. 그러나 다른 문헌은 퍼트남이 관찰한 두 지역의 차이를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이 만들어낸 결과로 재인식할 것을 주장한다(김상준, 2002). 이 논문 역시 사회자본에 대한 엄밀한 분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며 따라서 퍼트남의 연구 내용을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이 만들어낸 결과로 재서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apital Work)이 국가일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국가의 재분배 메커니즘과 사회의 일반화된 호혜성 메커니즘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철규, 1998, 『위기의 한국경제와 그 극복 방안』, 『당대비평』 봄호: 184~200.
- 공병호, 1993, 『한국기업 흥망사』, 명진출판.
- 국민호, 1999, 『동아시아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동노, 1999,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경제와 IMF 위기』, 『사회발전연구』 5권.
- 김명수, 1998, 『시장의 '신화'와 국가의 '오해』,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 전통과현대.
- 김상준, 2002, 『성찰적 사회자본과 귀속적 사회자본』, 한국NGO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성국·석현호·임현진·류석춘, 2004,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현대.
- 김성동, 2002, 『인물연구: 1960년대의 전설적인 새마을운동 지도자 하사용씨』, 『월간조선』 3월호.
- 김성진 편, 1994, 『박정희 시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였는가』, 조선일보사.
- 김성진, 2006, 『박정희를 말한다: 그의 개혁 정치, 그리고 과잉충성』, 삶과꿈.
- 김용학, 1996, 『연결망과 거래 비용』, 『사회비평』 14: 86~118.
- 김용학, 2003a,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용학, 2003b,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우택·김지희 편, 2002,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한림과학원총서 88, 소화.
- 김은미·장덕진·Granovetter, 2005, 『경제 위기의 사회학: 개발국가의 전환과 기업집단 연결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인영 편, 2002,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한림과학원총서 87, 소화.
- 김일영, 2004,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 정치사 강의』, 생각의 나무.

- 김지희 편, 2007, 『신뢰사회를 향하여』, 한림과학원총서 121, 소화.
- 김정렴, 1997, 『아, 박정희』, 중앙M&B.
- 김형아, 2005, 『유신과 중화학 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 류석춘, 1992,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 류석춘, 2002, 『한국의 사회자본: 연고 집단』,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 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류석춘, 2006, 『발전국가 한국의 지배 구조와 자본축적』, 김용서 외,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현대.
- 류석춘·김태은, 2002,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가(家)의 재구조화』, 『전통과 현대』 봄호(19호): 170~205.
- 류석춘·왕혜숙, 2006, 『참여연대 보고서』, 자유기업원.
- 류석춘·왕혜숙, 2007, 『외환 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64~97.
-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 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동창회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7집.
- 류석춘·이우영·장덕진, 2002,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류석춘 편저,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전통과현대.
- 류석춘·장미혜, 2002a,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 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류석춘·장미혜, 2002b,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 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동아시아의 연고 집단과 세계화』, 류석춘 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 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 『한국사회학』 39(6): 52~86.
- 박진도·한도현, 1999,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역사비평』 47: 37~88.
- 박진환, 1987, 『경제 발전과 농촌 경제』, 박영사.
- 박찬웅, 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그린.
- 베버(M. Weber), 1991, 『유교와 도교』,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 브란트, 1980,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 스콧(J. Scott), 2004, 『농민의 도덕경제』, 김춘동 옮김, 아카넷.
- 안병직·이영훈, 2001, 『맛집의 농민들』, 일조각.

- 야마기시(山岸俊男), 2001, 『신뢰의 구조』, 김의철·박영신·이상미 옮김, 교육과학사.
- 왕혜숙, 2004,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변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위스(L. Weiss), 2002, 『국가몰락의 신화: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용』, 박형준·김형준 옮김, 일신사.
- 이기준, 2005, 『국가 경제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이제·카터 에커트 편저,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 이만갑, 1984, 『공업 발전과 한국농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병천 엮음,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 이상민·이용수, 2007, 『사회자본 투자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기업의 사적 네트워크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2): 67~89.
- 이은옥 편, 2004, 『신뢰: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집문당.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37호(여름호): 65~93.
- 이재열,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 사회의 제문제』, 석현호·류석춘 공편, 『현대 한국 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현대.
- 이재혁, 1999, 『사회적 통제와 정치경제학—규범과 관습, 그리고 교환』, 김일철 외, 『한국의 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대우학술총서, 아르케.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 40(5): 61~98.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사회와이론』 10: 213~261.
- 장세진, 2003, 『외환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재벌의 흥망』, 박영사.
- 전상인, 2007, 『신뢰와 한국적 사회연결망 구조: 조선 시대 양반의 연대, 연계, 연줄』, 김지희 편, 『신뢰사회를 향하여』, 한림과학원총서 121, 소화.
- 정병은,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재경 안동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 1~28.
- 정병은·장충권, 2006,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9~37.
- 정운찬, 1998, 『한국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 개혁』, 『창작과 비평』 봄호.
- 정재영·장정호, 2007, 『교회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 S 교회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문화』 제1집 1호: 49~79.
- 정재은, 2007, 『아파트 주거공동체를 통해서 본 상층계급의 사회자본 축적과정: 방배동 L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정창권, 2003, 『미암일기: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 조동성 외, 2003,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월간조선사.
- 조선일보, 2004. 10. 19; 1963. 3. 5.
- 조희연, 1998,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36.
- 좌승희, 2006, 『한국 경제의 도약과 정체 그리고 향후 과제』, 김용서 외,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현대.
- 참여연대, 2005, 『삼성보고서1: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
www.samsungreport.org
- 최우영, 2006a, 『종친회의 역사·문화와 현실: ‘기억’과 ‘재현’의 논리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3(5): 307~346.
- 최우영, 2006b,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전통 사회의 농민조직: 향도, 두레, 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2호.
- 최장집, 1988,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 대안, 모색: 민주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6): 97~132.
- 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2006,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 울산 주전동 어촌계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40(4): 48~97.
- 퍼트남(R. Putnam), 2002, 『번영하는 공동체: 사회자본과 공공생활』, 류석춘 외 편저,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백산서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 핫토리 타미오 저, 2007, 『개발의 경제사회학: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변동』, 류석춘·이사리 옮김. 전통과현대.
- 홍영란, 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

- 원(RR 2006-16).
- 후쿠야마(F. Fukuyama),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구승회역, 한국경제신문사.
-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K. 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 Berger, P., 1988, "An East Asian Developmental Model?", in *In Search of East Asian Developmental Model*, edited by P. Berger and H. M. Hsiao,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Burt, R., 1992, *Structural Hole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g, Ha Joon, 2006,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 Zed Books.
- Chibber, V., 1999, "Building a Developmental State: The Korean Case Reconsidered", *Politics and Society* 27(3): 309~346.
- Chibber, V., 2002, "Bureaucratic Rationality and the Developmental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951~989.
- Chibber, V., 2003, *Locked in Places: State-Building and Late Industrialization in Ind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 Hein, 1997,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37(2): 24~41.
- Clegg, S., W. Higgins, & T. Spybey, 1990, "Post-Confucianism, Social Democracy, and Economic Culture", in *Capitalism in Contrasting Cultures*, edited by S. Clegg and G. Redding, NY: Walter de Gruyter.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ary).
- Davis, D., 2004, *Discipline and Development: Middle Class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P.,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 1973, "Strength of Weak Ti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3): 481~510.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C., 1985, "Political Institu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Asian Economic Development: Present and Future*, edited by R. Scalapino et al.,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Kenworthy, L., 2001, "Social Capital, Cooper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pp. 125~135 in *Beyond Tocqueville*, Tufts University.
- Kim, Eun Mee, 1997,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ohli, A., 2004, *State-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Cambridge.
- Lew, Seok Choon, 2000, "The Structure of Domin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Modern Korea", *Korea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Selected Papers from the Fourth Pacific and Asian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Chang, Yun-Shik, Donald L. Baker, Hur Nam Lin, and Ross King(eds). Institute for Asian Resear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Leys, C., 1996, *The Rise and Fall of Developmental Theory*, Indiana University Press.
- Mann, M., 1986,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 and Results", in *States in History*, edited by J. Hall, Basil Blackwell.
- Migdal, J., 1988,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anyi, K., 1957,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The Free Press & The Falcon's Wing Press.
- Portes, A.,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edited by Alejandro Portes,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 and J.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of Sociological Journal* 98(6): 1320~50.
- Putnam, R.,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spring): 35~42.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Rueschemeyer, D. and P. Evans, 1985,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oward and Analysis of the Conditions Underlying Effective Intervention”,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hlins, M. D., 1972, *Stone Age Economics*, Chicago: Aldine
- Schiff, M., 1999, “Labor Market Integration in the Presence of Social Capital”, *Volume 1.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2222*, World Bank.
- Schutz, A.,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hin, Jang Sup & Chang, Ha Joon, 2003, *Restructuring Korea Inc.*, Routledge Curzon.
- Skocpol, T.,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Byung Nak, 1990, *The Rise of the Korean Econo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Abstract]

**A Re-interpretation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ocial Capital:
the Interplay of Strong State and Strong Society**

Lee, Seok-Choon. Yonsei University

Wang, Hye Suk.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distill a coherent framework for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studies on Korean case, focused on “generalized reciprocity.” The 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 enables the community to retain its strong internal integrity. Further, it offers the intra-community mechanism of economic 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that solves the problem of free-riding and facilitates collective action for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In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 was internalized and saturated in both micro (families, villages, and enterprises) and macro (state bureaucrats) level. This explains why Korean developmental state was able to ensure its strong autonomy to facilitate and govern competition among various groups in the social sector into economic advancement. At the same time the strong and revitalized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sector prevented the state from degenerating into rogue state or predatory state. These two mechanisms, embedded in each other, generated the synergy which is the critical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sum, The economic development in recent periods in Korea can be a result of mutual embeddedness between redistribution mechanism of strong state and generalized reciprocity mechanism of strong

society.

Key Words: social capital, generalized reciprocity, integration, redistribution, organizational integrity, synergy

류석춘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발전사회학과 경제사회학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유교자본주의와 사회자본 등이다. E-mail: sclew@yonsei.ac.kr

왕혜숙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비교 연구와 사회자본 등이다. E-mail: wangwang@yonsei.ac.kr

(2008. 2. 26 투고; 2008. 4. 18 수정; 2008. 4. 25 채택)